

경제관계장관회의 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14-5
(서면, 공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생태계 회복 및 지원 복원 · 혁신 중심으로

2025. 12. 24.

관 계 부 처 합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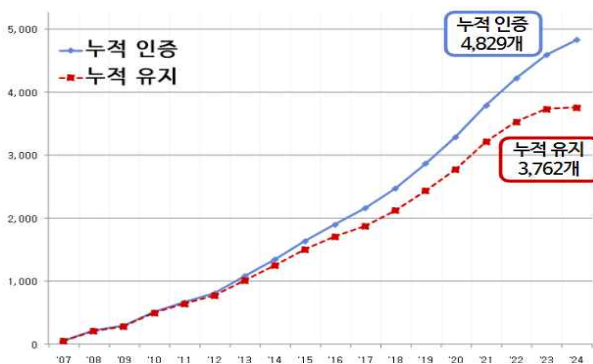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3
1. 목표와 전략	3
2. 추진과제	4
III. 세부 추진과제	5
1. 사회적가치 성과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5
2.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10
3.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11
4.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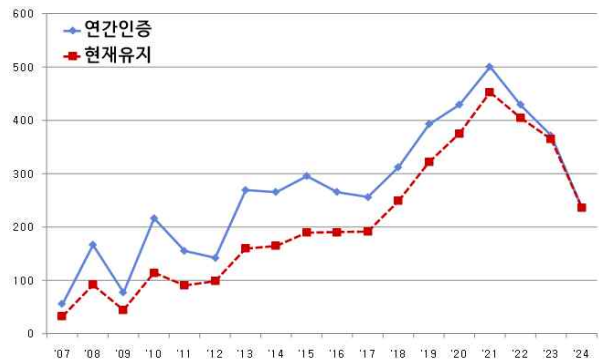
I.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주체
 -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 매출액 등 양적으로 성장
 - 다만, '22년을 정점으로 '23년부터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및 인증유지 기업 수가 감소하며 증가추세 약화

[누적 인증·유지기업 수 ('07~'24)]



[연간 인증·유지기업 수 ('07~'24)]



- 그간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 지원구조로 지속가능성에 한계 노출
 - 기존의 획일적 인건비 중심 지원은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장기 고용효과에 제한적
 - 개별기업 단위 중심 지원은 사회적가치가 기업 단위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구조적 제약
- 특히, 지난 정부 급격한 예산 축소, 민간 지원체계 폐지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 * [예산 축소] ('23) 2,042억 → ('24) 830억 → ('25) 284억('23년 대비 86% 감소)
 - [지원체계 변경] ('24) 민간지원기관(41개) 폐지 → ('24~'25) 정부(진흥원) 직영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재정립과 생태계 복원이 시급

[참고] 사회적기업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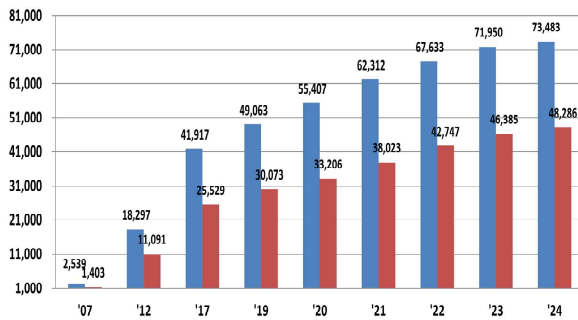
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증가

- '24년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 7.3만명 중 취약계층은 65.7%인 4.8만명으로, '07년(전체 2,539명, 취약 1,403명) 대비 약 3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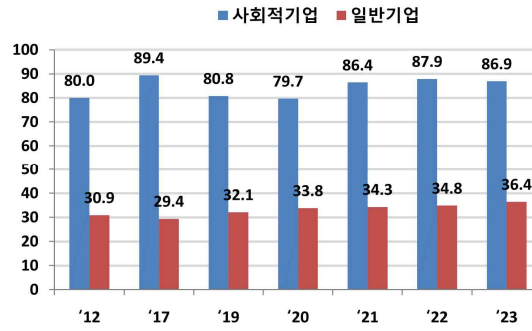
② 사회적기업 인증유지율(5년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유지율('23년 86.9%)은 일반기업 생존율('23년 36.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기 변동 속에서 고용 유지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특성

① [전체 근로자(취약계층) 수(명)]



② [5년 인증유지율(%)]



③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24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445만명으로 전년(487만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07년(1.7만명) 대비 크게 증가(262배)

※ 분야별 실적 및 사례

- (돌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 간병,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제공,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 등 제공(232만명)
- (주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 수리,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주거 인근 유희공간, 골목 환경 정비 등(57만명)
- (문화) 문화 소외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영상 상영,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영상 음성 해설, 자막 제작 등(82만명)
- (환경) 폐플라스틱,스티로폼 수거 등 지역 환경 정비, 탄소중립 등 캠페인(15만명)

④ 사회적목적 재투자 증가

- '24년 사회적목적 재투자 기업수는 2,485개로 '07년 대비 크게 증가(78배), '24년 재투자 금액도 3,803억으로 크게 증가(93배)

*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개] ('07) 32 → ('17) 943 → ('22) 2,380 → ('23) 2,394 → ('24) 2,485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억] ('07) 41 → ('17) 695 → ('22) 2,235 → ('23) 2,839 → ('24) 3,803

II. 추진방향

1 목표와 전략

❖ **[목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4대 전략]**

①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② 지역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③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④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① [가치]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

- 기존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에 기반을 두고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 사회적가치 성과가 높을수록 더 성장하는 구조로 유도

② [협력]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 약화된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해결하는 '지역사회 기여(local Impact)' 모델을 구축
 - 지방정부 - 사회적기업 - 민간지원기관 - 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
 - 지역주체가 협력을 통해 이룬 사회적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신설

③ [혁신]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 지원 센터로 중형화(19 → 6개) 하여 인증·SVI 등 공공행정 지원 강화
- 현장밀착형 지원기능 강화 위해 민간지원기관 협력체계 복원 및 확대
-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공공·민간부문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 강화

④ [지속]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 법·제도 개선 통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

「생태계 회복」과 「사회적가치」 기반 지속 성장

1.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②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제고 유도

2.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 ① 지역 주체 간 협력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 ② 지역 내 사회적기업 사회성과 확산 위한 인센티브 신설
- ③ 지역·현장과의 협력적 논의기구 마련

3.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 ①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 ②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③ 공공·민간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

4.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②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

중앙 · 지방정부 · 사회적기업 · 민간기관 “협업 거버넌스”

Ⅲ. 세부 추진과제

1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획일적 지원 방식이 아닌 발굴 - 육성 - 성장단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가치 성과 확산 유도**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발굴] 창업지원

- 창업 진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개편·복원 ('26년 300억 (500팀, 팀당 2~5천만원 지원))
 - ①초기 창업형부터, 사회적기업 ②인증전환형, 창업실패·중단기업의 사회적가치 기반 재도약을 지원하는 ③재도전형 등 유형별 접근
 - * 청소·경비·폐기물 운반 등 공공서비스 다수 위탁업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사전 기업진단 - 역량강화 - 투자·판로 연계 - 성과관리 -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개편 전·후 비교〉

	~'23	'24~'25	'26~
지원방향	단순 발굴 중심	폐 지	인증 전환 중심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예비 또는 초기 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형(창업 5년 이내 기업) · 인증전환형(창업 5년 초과 기업) · 재도전형(폐업 등 이력 있는 기업)
지원규모	균등지원(30백만원)		유형별 차등지원(20~50백만원)
사후관리	창업종료 후 관리 미흡		창업지원 졸업팀 대상 멘토링 등 후속 지원 강화

[육성] 고용 창출 지원

- 초기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복원하되, 전면 개편 ('26년 국비 321억+지방비 107억)
-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 유도
- 사회적가치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수준 및 기간을 우대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 전·후 비교〉

	~'23	'24~'25	'26~
지원대상	일반인력(일반+취약계층), 전문인력을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폐 지	일반인력(취약계층)을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조건	①신규고용 & ②고용기간 제한 없음 & ③상시근로자 조건 없음		①신규 고용 & ②6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③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SM 탁월·우수기업은 지원)
지원수준	최저임금의 70%(취약계층)		月 50~90만원(SM 우수 이상 우대)
지원기간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최대 3년(기본 2년 + SM 탁월·우수 1년)

-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 쉬었음 청년에 사회 적응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회 제공, 사회적기업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
 -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쉬었음 청년의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의 일경험을 지원하면서,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 등 적응력 향상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사회적기업 고용 적극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인건비 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적극 취업 알선

[성장] 판로·경영·자금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개편 전·후 비교〉

	'25	'26
① 판로지원	다양한 채널 판로지원 부족	신규 판로 플랫폼 활성화, 공공, 지역 내 구매수요 창출
② 경영지원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불충분	성장단계별 역량 제고 및 세제 지원 확대
③ 자금지원	정책·민간 자금조달 부족	정책(응차지원 신설) 및 민간 자금지원 확대·연계

① **[판로지원]** 판로플랫폼 개편 및 공공구매 확대 유도 ('26년 50억)

- 온라인 판로지원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착한 상품' 및 '착한 소비' 확산

*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판로 플랫폼 신규 개통·운영 ('25.9월~)

[공공기관: '가치장터'] 실적관리 및 결제 간소화, 맞춤형 구매지원, 나라장터 연계('26.1월)

[국민: 'Store36.5'] 생산기업의 사회적가치성과 정보공개, 제품 추천, 기획전 등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제도 내실화

- 사회적기업 제품 생산범위 기준을 명확화하여,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높이고 우선구매제도 활용 확대 유도

* [생산범위] (기존) 사회적기업 제품이 아닌 완제품에 미세가공 시 가공부분 한정 인정

→ (변경) 중소기업 제품에 미세가공 시 전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인정

- 사회적기업·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 및 구매상담회 활성화 (연 3회 → 연 12회, 매달)

-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 및 '고향 사랑 기부제' 연계 강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판로지원 확대

*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지방정부·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발굴·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26년 3억)

② [경영지원] 기업 역량 제고 및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지원 강화

-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부터 규모화 단계 등 성장 단계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26년 77억)
 -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26년 1,100개),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모델 고도화(100개),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사회적기업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코칭
 - * 'AI와 함께 하는 사회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기업 등 민간(마이크로소프트, '25.12 MOU 체결) 연계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추진
 - * ①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25년말→'28년말), ②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비율 상향(20→30%, '26.1.1~), ③관세행정(추징세액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분납 허용 등)

③ [자금지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위한 자금지원 확대 ('26년 8억)

- '26년 민간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 대상 융자지원 신설
- 모태펀드 투자 등 마중물 정책자금을 확대해 안정적 경영지원, 크라우드 펀딩, 투자설명회(IR) 등 통해 민간자금 확보 역량 제고

구분	내용
융자지원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220억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최대 3억원 한도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등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모태펀드 운용 * 총 568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 사회적기업 등에 442억원 투자('11년~)
크라우드 펀딩, IR 대회	·(크라우드 펀딩) 사회연대경제 펀딩 전용관을 운영하여 민간자금 유치 ·(IR 대회) 후원사 대상 투자 설명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교육·안내	·(교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상·하반기) ·(안내)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길라잡이」 누리집 통해 자금지원 정보 제공 (https://socialeconomy.seis.or.kr)

④ [부처협업] 중기부의 투자·융자(임팩트 펀드·정책자금), 성장지원사업 (TIPS, LIPS* 등) 등 부처간 이어달리기 방식 연계 지원체계 추진

- * 민간투자사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하거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LIPS:Lifestyle biz Program for Small brand) 할 경우, 사업화자금 등 매칭 지원

②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제고 유도

-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을 위한 사회적가치 평가와 사업연계 확대

[참고: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 (정의)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
- (지표구성) 3개의 평가 관점(①사회적성과, ②경제적성과, ③혁신성과)에 따라 총 14개 지표 구성
- (측정결과)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개 등급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산출

- 기존 민간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연계사업 외에도, 인건비 지원, 경영·판로 등 각종 성장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우대 적용
- 사회적가치 측정결과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간 연계 강화 추진
* (예)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SVI 우수이상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한 실적 가산

-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 (지표) 업종별 편차 축소 등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현장 수용성 제고, 타 화폐가치 기반 사회성과 지표와의 정합성·연계 가능성 검토
- (평가) 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적가치평가 위원회' 설립·운영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도모(26~)
- (유효기간) 사회적가치 평가지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표의 활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 원활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미흡·취약 등급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화 코칭 제공
-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 전 자가진단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측정 준비 과정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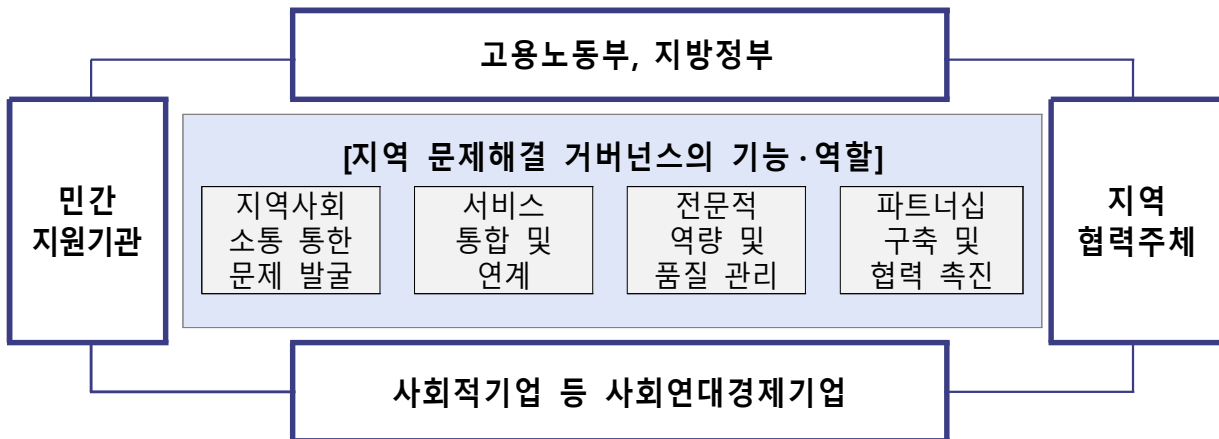
-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확산 도모

① 지역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방정부, 민간지원기관 등 지역주체 간 협력모델 구축 ('26년 국비 137억+지방비 59억)
- '26년 노동통합 및 통합돌봄 문제해결형 협업 모델을 시작으로, 성과분석 후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모델로 확대
- *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모·선정, 중앙(70%)·지방(30%) 매칭 지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개요〉

· 거버넌스 추진체계안



· 전략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예시

노동통합	①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패키지 운영: 심리상담, 금융 컨설팅, 취업지원 등 ②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등 사업 지원: 교육훈련, 현장적응 지원 등 ③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방정부·사회적기업·지역대학 등)
통합돌봄	①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 영양관리, 건강, 안전 이동, 주거 관리 등 ② 돌봄 서비스 고도화: 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전문가 양성 지원 등 ③ 돌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지방정부·병원·보건소·사회적기업 등)

②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보상 강화** (‘26년 국비 50억+지방비 50억)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환경개선 등에 기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성과 비례 인센티브 지급**
 -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성과를 측정·검증한 이후 사회성과의 20% 범위 내 인센티브 지급 [중앙(50%)·지방(50%) 매칭지원]

③ 지역·현장과의 협력적 논의기구 마련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발전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긴밀한 소통 강화**
 - 당사자조직·지원기관·현장기업·전문가 등 참여하여 정책방향을 설계 및 평가하는 **‘가칭’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성·운영(‘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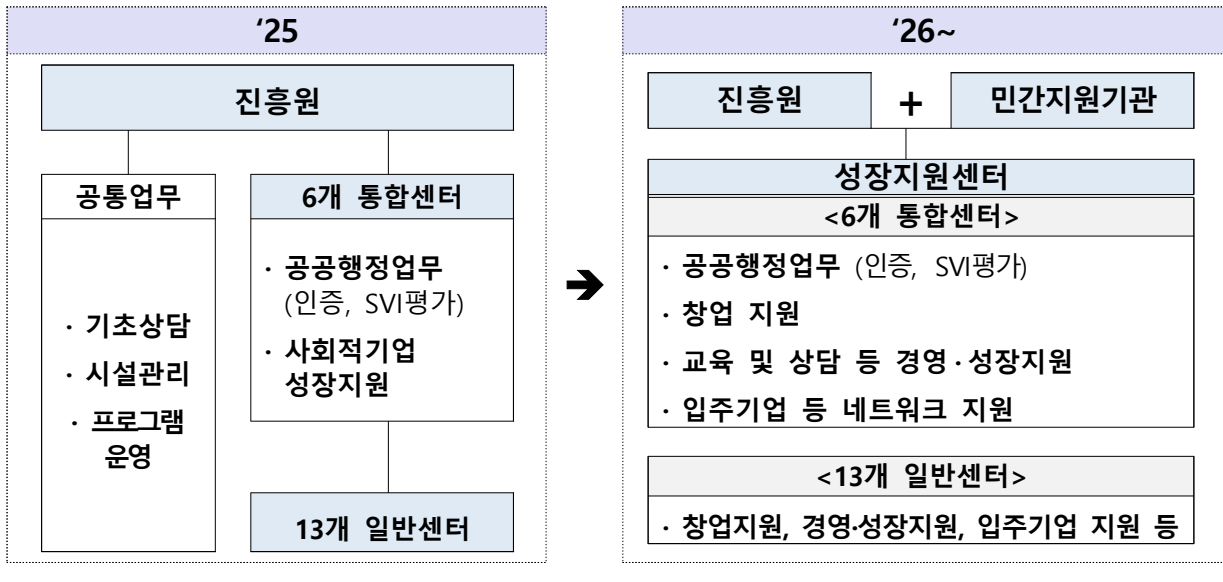
3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 ❖ 정부 주도도, 민간 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 ❖ **공공·민간의 ESG 활동과 사회적기업 활동 간 연계 확대**

① 지역·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민관협업 구조를 형성하여 현장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혁신**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역별 특성을 반영, 권역별 센터로 **중형화(19→6개)** 하고 **인증·SVI 등 공공행정의 현장성·공정성 강화**
 - 민간지원기관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전문성 제고**
 - * 지역 내 우수역량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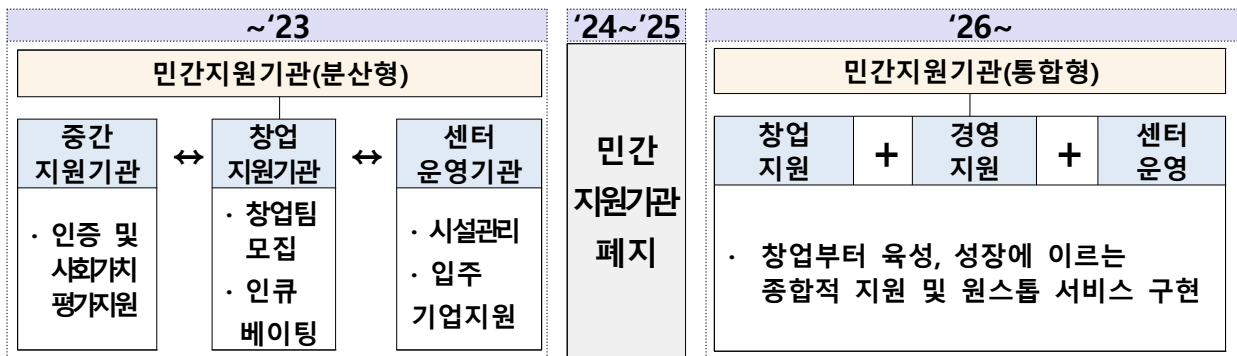
〈정책 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②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성장지원센터) 및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지역 현장 기업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서비스 연계 강화
- 기존 창업지원(민간기관)과 경영지원(성장지원센터)을 분절적으로 제공 → 성장지원센터에서 통합 제공(창업+경영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편*
- * 17개 권역별 기관(17개 광역지자체 소재 성장지원센터에서 상주하며 창업+경영지원), 3개 특화기관(돌봄, 친환경, 디지털 업종 전국단위 창업지원)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통해 공고, 각종 구비서류에 대한 자동 연계 등 통해 원스톱 서비스 구현*
- * 사회적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인증 정보, 고용실적, SVI 결과 등을 자동 연계해 별도 자료 제출 부담 완화, 지방정부 지원사업 공고·신청·접수 기능 추가

③ 공공·민간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

- 공공·민간의 CSR·ESG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혁신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
 - 사회문제 해결 위한 연대 플랫폼 ('25.9월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 출범) 다변화·확대를 통해 상시적 정보·자원 연계 강화
 - 향후 다양한 지역·민간 중심 협력모델을 표준화하여 사례 확산

모델 유형	협력 목적	주요 자원	주요 내용
자금지원형	성장기반 강화	ESG 투자, 사회공헌기금 등	·확장·혁신 프로젝트 지원 ·인턴십 및 투자유치 연계
서비스 연계형	운영 효율화	물류, 마케팅, IT 인프라 등	·특히IT·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등 맞춤형 연계
전문 프로보노형	경영역량 강화	회계·법률·특허 등 전문가	·법·회계·노무 등 전문가 매칭 ·성장 애로 해결 컨설팅

- 민간·공공기관 자원(자금, 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과 사회적기업 간 연계하는 캠페인(Social Enterprise 브릿지 캠페인) 등 협력 강화

* KDB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4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자조기능 강화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인증 사회적기업의 필수적인 사회적목적 재투자 금액(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체적인 안정적 재원 마련
 - 용자 등 공제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보호 및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연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도약

-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법정단체 신설 및 협의체 구축
 - 당사자조직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공식 주체로서 소통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파트너 지위 부여
 -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진흥원(성장지원센터)+지방정부 간 상시적 협의체 구축·운영
-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5→3년)·변경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 주식상장 등으로 인증요건(사회채투자 등) 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 지속 추구를 전제로, 인증 졸업(Exit) 인정제도 도입 검토
 - * 예) B-corp 인증 등 사회적가치 추구가 확인되거나 연계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가칭} '사회적기업 명예의 전당'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②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

-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각적 홍보 강화 ('26년 5억)
 -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홍보('26년 3분기~)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우호적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 역할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시상식 확대 개최, 우수 사례 기획 홍보, 플리마켓 등 만남의 장 등을 통해 점점 확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26년 7억)
 - 온라인 교육(소셜클래스) 및 청소년 봉사학습 운영, 업무담당자 교육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내실화
 - 사회연대경제 인재양성 위한 '인재개발원' 설립 타당성 검토
 - * 인재개발원 설립 타당성 분석('26년, 3억) 후 설립 여부, 기능, 부지 등 검토 계획
-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패널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과 등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